

논문 리뷰 - 정문영, 1999, “광주 ‘오월 행사’의 사회적 기원: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논평 I

광주지역 지식인 계급 탄생의 기원과 5월의례

권 가 람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수료)

1980년 5월항쟁 이후, 5월은 더 이상 광주시민들에게 예전의 5월일 수 없었다. ‘모란이 피는 5월’은 ‘잔인한 5월’이 되어버렸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5월 의례’를 통해 기념해 왔다. 그러나 그 기념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주화의 성지’ 혹은 ‘국가’ 혹은 ‘중앙’에 대응하는 단위로서 일원화된 (적어도 일원화된 것처럼 보이는) 광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세력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권력과 배제의 역학이었다. 정문영은 5월을 기념하는 5월의례의 의미변화를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역 행위자들의 다양한 입장차를 보여주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부상하는 지식인들의 역할을 지역 권력 관계의 재편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1980-1995년까지의 광주 지방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조사를 위해 연구자는 5월의례와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1998년 4-6월이라는 2개월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물론, 논문의 저자가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현지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 질문을 작성하게 된 이후 저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참여관찰 못지않게 ‘역사적인 기록, 주요행위자들의 증언’을 찾아 문헌조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통해 수집된 기록들을 단순히 민족지적 배경을 서술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광주의 5월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를 드러내주는 분석을 위한 핵심적 데이터로 다뤄진다. 1980년에서 1995년의 긴 시간 동안의 5월의례의 의미변화를 추적하는 것, 곧 의례연구의 역사화는 저자의 심도 있는 문헌조사를 통해 가능했으며, 인류학의 현지에 대한 참여관찰이라는 방법론적 강점과 문헌조사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연구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이해하는 의례는 통합의 기능을 가진 것도, 갈등표출의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모든 면모가 상호모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의 의례다. 의례가 이렇게 ‘복잡한’ 모습을 갖는 것은 의례가 갖는 ‘권력의 중심성’ 때문이다. 의례를 누가 집전하고, 어떻게 치르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의례가 표상하고자하는 의미 전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례화된 광주의 5월

의례를 분석의 중심에 놓은 저자의 전략은, 5.18의 다양한 의미 해석을 놓고 경쟁하는 지역행위자들을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권력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라는 수많은 시공간적 조건의 얽힘 속에 존재하는 ‘입장지어진 주체’로서 이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 주효했다고 보여진다.

저자에 의하면, 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그 사건과 이를 기념하는 의례의 의미화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읽고 쓸 줄 아는 언어의 능력’을 가진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이 과정은 다시 말해 ‘대동의 축제 한편에 각인된 배제의 역사’(5)를 논하는 것과 같다. 사실, 광주시민들은 광주항쟁 직후부터 80년 5월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아니다. 80년 광주사태 직후 3년간 행해진 광주의례는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숨겨진 사본’(Scott 1990) 혹은 ‘공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중적 의미를 갖거나 행위자의 정체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위장(disguise)과 익명성의 정치’(Scott 1990:19)의 형태를 띠었다(37). 이러한 비가시적 저항이 공개적 저항이 된 것은 87년 6월항쟁과 그 결과로 탄생하여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게 된 6.29선언이다. 80년 이전만 해도 구경꾼에 불과했던 군중(52)들은 ‘놀이’처럼 된 시위에 ‘자신들만의 양식’(50)으로 시위를 전개한다. 소위 시위에 ‘맛을 들인(53)’ 군중이 탄생한 것이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 진상규명에 대한 촉구 등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며, 저자는 이를 통해 5월 의례의 기원은 지식인, 관료, 시민 등 특정인들에게 소속된 것이 아닌 다양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87년 이후의 제도화된 언론의 자유는 시위 참여 주체의 다양화를 가져온 한편, 새로운 ‘공공 영역’을 통해 5.18을 공적 토론의 대상으로 범주화한다. 광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만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시대를 지나 5.18이 공적인 토론의 대상이 된 시대, 5월 그날은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언어의 소유 여부가 토론자의 권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광주의 5월은 공공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5.18 담론의 생산과 이용은 전문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광주라는 지방 사회의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77). 5.18의 역사를 정교한 과학적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저자(author)’로서의 권위가 탄생할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5월 투쟁과정에서 ‘죽음과 부상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서 싸웠던 사람들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죽어야 했던 사람들은 대개 ‘못 배운 사람들’이었던 반면, ‘증언’을 위해 살아남았던 사람들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인 지식인들이었던 것이다(105).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79)이 새로운 경쟁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주변화되는 또 하나의 목소리는 운동권의 그것이었다. 저자는 ‘놀이 혹은 ‘카니발’이 된 5월 의례가 반구조 이후 구조로 편입되는 일시적인 ‘반란의례’로 해석할 것을 경계하고, 5월의 리미널한 조건은 기존 정치적 질서에 불만이 있었던 자들에게 봉기를 기획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5월 의례의 다양한 의미화 시도 속에서 그 노력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세력은 다른 누구보다 ‘운동권’이었다. 87년 이후 광주 운동권의 세력을 주름잡게 되는 ‘국본’은 80년 광주항쟁을 ‘자본제화에 대항한 대중봉기’로 의미화 하였고, ‘혁명’과 ‘대중봉기’라는 수사를 통해 5월의례를 또 다른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5.18 광주

를 둘러싼 언어의 시장에서 배제된 세력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종종 공격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었고, ‘머리싸움’(80)이 필요해진 시대, 이들의 행위양식은 ‘질 수밖에 없는 것’(80)이었다. 곧, ‘말의 해방’을 가져다 준 공공영역의 등장은 ‘확대와 배제를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 되었다(82). 저자의 분석은 광주외곽의 탈정치화 혹은 문화화라는 의미변화를 ‘민주정의 도래’라는 식의 거시적 정권 형태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순진한 시각임을 보여준다. 90년대 중반이후 5월의례의 탈정치적 성향은 87년 6월항쟁 이후 탄생한 공공영역과, 그 내부에서 언어의 힘을 통해 새롭게 권위를 획득한 지식인들에 의해 5월 행사가 적극적으로 문화화된 것이다.

5월의례는 한차례 ‘문화화된’ 이후 ‘상품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남지역의 향토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된 ‘남도문화론’과 80년대 이후 한국의 문학, 사회과학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민족’, ‘민중’의 담론(124)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70년대 이후 호남의 지식인들에 의해 제시된 ‘남도문화론’은 호남의 민속과 역사를 ‘서민적, 풍류적, 반골적이며 타지역에 비해 독자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비록 이것이 ‘직관적이며 학문적으로 미숙한 것’(123)이었지만, 호남지역 및 호남인에 대해 존재해 온 구조적, 인식적 차별에 대항한 지역인들의 최초의 ‘학문적이며, 진지한 반박’(123)이었음을 저자는 주장한다. 이 같은 호남인의 모습은 80년대 민중 담론 속에서 외세에 대항한 민족의 전형으로 80년 5월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표상해낸다. 다만, 광주 내부 지식인들의 ‘남도문화론’과 한국사의 ‘민중론’이 즉각적으로 결합한 것은 아니었으며, 저자는 그 계기를 90년대의 세계사적 변화라는 좀 더 넓은 틀 속에서 지역사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80년대 내내 ‘혁명’, ‘봉기’라는 언표를 통해 외부의 세계와 접촉하던 5월의 광주는 1991년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그 언표의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낡은 언어코드는 지식인들에 의해 광주를 ‘민중의 미학’으로 전환된다. 그 중심에는 90년대 이후 ‘문화’ 담론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의 성공이 있다. 호남에 대한 낙인은 유흥준이라는 외부적 지식인의 시각을 통해 외세의 지배에 항거한 주체로서 한민족의 모습이 현현한 민중의 전형으로 광주시민이 그려지고, 그 저항의 계보에 80년 5월항쟁이 굳건히 자리 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항쟁의 역사가 하나의 ‘민중적 미학’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이를 ‘상품으로 볼 수 있는 내외부적 시선이 동시에 창출됨’으로써 이루어진다(111). 결국, 혁명이라는 체제변혁적 언표를 민중의 미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단지 그 삶 자체가 아닌 하나의 읽어내야 할 ‘텍스트’로 치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미학’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인들의 작업이었으며, 80년 5월 광주의 의미가 또 한번 변형되는 방식이었다. 저자가 보는 80년 이래 광주의 5월이 ‘문화화’되고, 일종의 ‘관광상품’이자 ‘문화예술축제’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은 광주지역에서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권력계급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5월의례의 의미가 변화해감에 따라 80년 이후 광주 지방 권력관계가 지식인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광주 내부의 정치적 역동에 의해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저자는 이를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사회의 좀 더 거시적인 맥락과 나아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연구의 탁월함을 더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과정은 지식인들

에 의해 그 ‘의도가 명확한 형태를 취했던 것도, 지식인들의 합의된 목표도 아니었지만(106), 광주항쟁이라는 사건을 통해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계급차’를 확실히 느끼게 해 준 계기였다(107). 저자의 이와 같은 광주지역에 대한 분석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민주화 이후 공공영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전문 지식인의 권위 변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광주항쟁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 언어를 통한 공공영역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후, 저자의 해석에 따라 그 언어를 갖지 못한 광주항쟁의 당사자들이 공공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었는지는 다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논문의 저자가 ‘공공영역’의 대두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식인’적인 문제 제기일 수 있으며, 오히려 80년 이후부터 항쟁에 참여하지 않고 논쟁에 ‘혀를 걸쳐 왔던’ 정치인, 지식인에 지친 자들에게 공공영역의 탄생이라는 것은 감지되지 않거나 광주항쟁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기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며 별다른 기대를 품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광주항쟁 논의에 있어서 공공영역이 등장하는 역사는 지식인 이외의 계급을 ‘배제’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지식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다양한 움직임들에도 새로운 연구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 논평 II

정문영, “광주 ‘오월 행사’의 사회적 기원: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1999)에 대한 리뷰

부 경 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구원)

정문영(이하 ‘저자’라고 함)의 석사학위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지, 정치적·사회적 지형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가운데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 이후 지역에서 펼쳐지는 관련 기념의례와 축제 등 이른바 ‘5월 행사’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통해 광주 지역 사회사의 일단을 읽고 있다. 저자는 1980년 이후 5월 행사가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변화 양상을 ‘문화화’와 ‘상품화’라는 측면에서 특징 지우고 훑아보는데, 5·18 당사자를 포함하여 5월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

양한 주체와 집단들, ‘광주’라는 지역사회의 여러 역사적 함의와 문화적 맥락, 때로는 한국의 전반적 시대상과 사회적 흐름 속에서 관계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켜 매우 밀도 있게 분석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저자가 논문을 쓴 시기이다. 저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한 90년대 중후반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당시 ‘사건’에 대한 일련의 사법적 판단이 ‘새로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 등 5·18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변화하던 시기였다. 논문에 따르면 이 즈음하여 5월 행사 역시 “투쟁에서 축제로” 드라마틱하게 변환되었는데, 저자는 5월 행사의 성격 변화를 당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쉬이 간주해버리지 않고 그러한 양태를 이끌어내게 된 이면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제들을 찾아낸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저자 역시 5월 행사라는 ‘의례’를 “서로 다른 지향과 에토스를 지닌 여러 세력들에 의한 경합의 장”으로 보고 그 형세를 그려내는데, 흔히 ‘광주’ 혹은 ‘5·18’로 쉽게 일괄해버리는 당시의 경험자나 당사자 집단이 실은 동질적이고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정치적 사건 이후 벌어진 (어쩌면 더 정치적인) 다양한 행위자 간의 경합 과정은 현재의 ‘5월 광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5월 행사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서 실제적 진실 규명이나 역사적 의의 부여 등과 같은 기초적이고 선결적인 행위에 대한 갈등과 경합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릇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대규모 폭력이나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회 내에서는 기억의 재구성에 있어 보통의 경우보다 더욱더 여러 층위와 다양한 집단들 간의 역사적 해석과 기억행위를 둘러싼 갈등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흔한 일인데, 광주의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이는 저자가 그러한 지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5·18과 광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역 내에서 여러 집단으로 분절화된 행위자들이 적어도 당시의 진실과 의미를 부정·부인하거나 폄하해버리는 외부 집단들에 대(항)해서만큼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90년대를 지나면서 당시의 역사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수용 정도와는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의해 사법적, 행정적으로 공식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5월 의례와 담론 생산의 전유를 둘러싼 여러 주체 간의 경합은 본질적인 역사적 이데올로기의 쟁취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상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에서의 경쟁이 되었고,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집단 간 차이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점들이 선택되면서 문화화와 상품화의 과정 역시 증폭된 것으로 해석된다.

선부른 추측이 될 수도 있지만 저자는 이러한 정치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공공 영역’으로의 편입에 실패하고 ‘축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 이름 없는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힘과 그에 기반한 ‘5·18 정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저자에 내재된 이러한 시선이 이 거대하고 다층적인 논의를 힘 있게 끌고 온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

■■ 저자 답변

정 문 영

(번역가,

Cornell University 역사학과 박사수로)

우선 상당히 오래 전에 쓰인 논문인데도 리뷰의 자리를 만들어준 편집위원들과 미숙한 글의 문제의식을 잘 짚어주신 두 분의 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5년도 더 지난 과거에 자신이 쓴 글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임엔 분명합니다. 본전은 고사하고 쪽박이나 안 차면 다 행일 거고 잘해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일 테니까 말입니다. 표현의 과잉으로 성찰의 천박함을 가리고 수사의 남발로 이론적 미숙을 포장하는 20대의 나를 40대 중반이 되어 되돌아본다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20대엔 다 그렇다고, 나는 개중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속 편하긴 하지만 어쨌건) 스스로도 민망하고 역겨운 짓거리라서 어지간하면 그럴 기회를 만들지 않고 그저 몇몇 낭만적인 기억의 단편에 머물러 있는 편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속마음 한 켠엔 흐뭇함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과거의 미숙한 글에 대한 리뷰를 마주한 자로서는 그 글에 대해 제기된 의문이나 비판에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거나 핏대 세워가며 반박하는 건 어쭙잖은 일일 테고 차라리 보다 나은 현재의 연구와 프로젝트로 답변하는 편이 더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자나 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어쩌다 한 편씩 쓰는 단편적인 글이나 술자리의 허무한 악다구니 외에는 과거의 문제의식과 현재의 생각을 이어주는 통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 수 없이 일단 평자들의 논평을 실마리로 하여 몇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권가람 선생님의 논평에 관하여, 권가람 선생님의 논평은 많은 부분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제기했던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난해한 텍스트를 전 한 번도 (너무 골치 아파서) 진지하게 읽지 못했지만 그가 푸코와 들뢰즈를 비판하면서 제기한 주장은 대충 지식인은 결코 투명한 주체가 아니며 그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특권은 개인적인 거부로 간단히 부정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이 속한 제도적 장에 대한 비판은 비록 건전한 형태일지라도 그 제도의 지속과 강화에 부지불식간 공모할 수 있고 이는 ‘나는 예외다’라는 언명으로 간단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곤란입니다. 저의 논점 중의 일부가 ‘이미 지식인적’이라는 권가람 선생님의 논평은 매우 날카롭고 통렬한 것이어서 지금 당장은 어떤 확정적인 반론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치는 크레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건 실천적으로건 우리가 이 역설에서 빠져나올 길은 난망해 보입니다. 당분간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나는 크레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도 없어서 크레타 사람이 ‘아닌 듯

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지난 콜로퀴움 때 전해드렸던 <침묵의 고고학, '유언비어'에 관하여>라는 글은 권가람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또한 권가람 선생님께서는 위와는 약간 결이 다른, 장의 구조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배제냐 아니면 자발적인 불참이냐는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이는 서로 반제라기 보다는 조건과 선택의 관계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현재 정치 현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이나 무관심과 비슷한 관계일 텐데, 쇠귀에 독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둘째, 부경환 선생님의 논평에 관하여. 논문의 저자인 저도 이번에 다시 글을 보면서 부경환 선생님의 지적에 많이 공감하는 한편으로는 5.18에 관한 한, 그리고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관한 한 과거 1990년대의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5.18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노골적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5.18의 복권은 시간문제로 보였으니까요. 5.18에 대한 해석에 있어 지금의 상황은 절망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도 있었고 소위 '민주 정부'가 들어서서 등 희망찬 미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했지만 일말의 불안의 증후가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불안의 요소는 당시의 대학 운동권, 지식인 등을 포함해 범 민주화 세력 내부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론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산(死産)의 증후가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에 따리를 틀고 있는 지적 무기력, 반지성주의, 논문중심주의 등은 그러한 증후들이 현실화된 양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성이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 부경환 선생님이 읽었듯이 제가 만에 하나 "새로운 '공공 영역'로의 편입에 실패하고 '축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 이름 없는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 힘과 그에 기반한 '5·18 정신'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다면, 그건 결코 지식인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혹은 지성 대신에 그들에게 거는 기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논문에서 묘사한 사회 과정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지언정 그들에게서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거나 그들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5.18 이후 실제 그들의 행보는 과연 그들이 5.18의 주역이 맞나 의심스러울 만큼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조차 최고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 게 사건으로서 5.18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지성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에너지와 교신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 에너지로 충전 받지 못한 지식은 불모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 이름 없는 것들이 지닌 근원적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불안합니다만 이것으로 권가람, 부경환 두 분 평자의 논평에 대한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논평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못 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술기운을 빌어 재개했으면 합니다.